

건보재정, 2026년부터 '적자'... "보험료율 8%까진 안올려"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운영 현황 공개 "필수의료 분야 등 재정 부담, 감당 가능 수준"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효율적 재정 관리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보료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정 상한선인 8%까지는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운영을 보면 당기수지는 2024년 2조6402억원, 2025년 4633억원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6년부터 3072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8년에는 1조5836억원으로 적자 폭이 늘어난다.

누적 적립금 규모도 2024년 30조6379억원에서 2028년에 28조4209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일 열린 출입기자단 사전 설명회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추계하고, (향후 재정 투입이 확대될) 필수의료에 대한 부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원을 추계한 것"이라며 "현재 생각하기에는 필수의료 분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단 건보 재정 전망은 분석 기관과 변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서 국회 예산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다. 2032년이 되면 누적 적자액이 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예산처 추정치는 2023년 실적이 반영 안 된 것"이라며 "(국회예산처는) 코로나19 이후 의료 이용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 과거처럼 9%, 10%씩 증가한



게 아니라서 지출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근 발표한 '정책 패키지'에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자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전년 대비 동결됐다.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은 8%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대폭 투입하더라도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까지 이르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준비금이나 최근 의료 이용을 보면 보험료가 8%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험 체계를 일부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 급여 항목 재평가로 주기적으로 실시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는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급여인 물리치료를 같이 받지 못하는 식이다. 급여가 적용되는 배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 수술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같이 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목과 시점은 아직 설정돼있진 않다"며 "의료적 효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급여 빈도 자체가 아주 줄어드는 항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하며 비급여 명칭·분류코드를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과 해당 항목별 권장 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절하게 관리하고, 의료 전문가가 스스로 적정 의료 목록을 작성하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해 의료 서비스 과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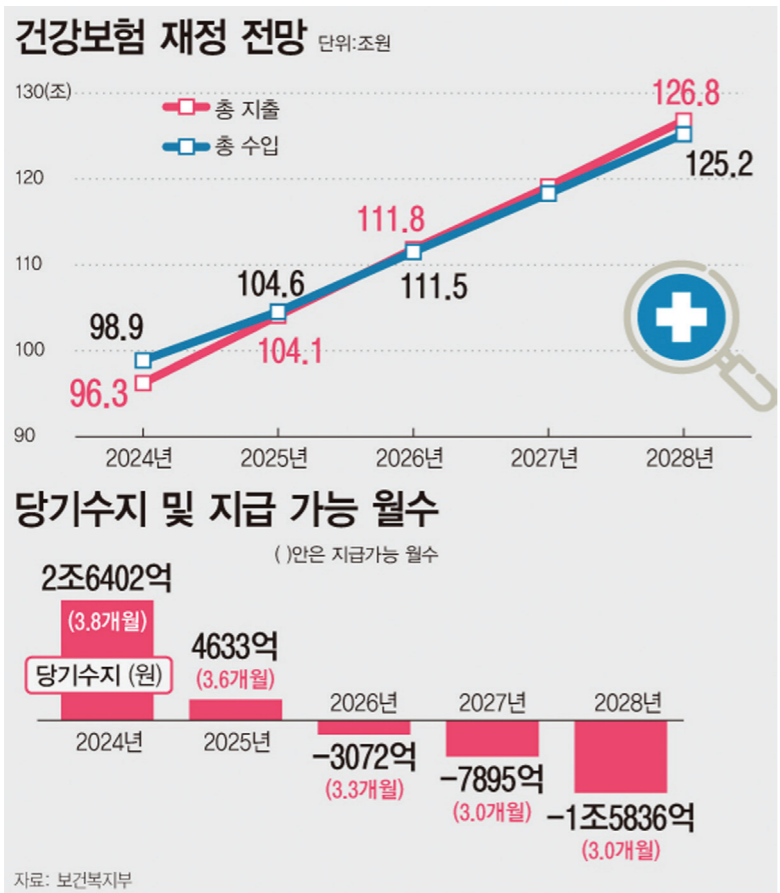
공급을 방지한다. 또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OECD 5.9회에 비해 15.7회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한다. 유튜브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건강보험 재정 지표는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 재정 운영·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서 지출 효율화는 공급자에 의한 과도한 의료 제공 관리 방안과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 남용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있다"며 "의료 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